

##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기

### 새누리의 진단

- 북한은 북방한계선(NLL)을 부정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군사적 도발 지속
- 전시 작전권 전환에 따른 안보 약화 가능성 우려
- 외교·안보 정책의 총괄, 조정을 통해 정책 혼선의 방지 필요성 대두

### 새누리의 약속

- NLL에 대한 도발 불용
- 외교·안보·통일 정책 컨트롤타워(가칭 국가안보실) 구축

### 새누리의 실천

- 북한 도발 억지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
-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

## 북핵문제,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

### 새누리의 진단

- 북핵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
  - 2012. 4. 13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강행(실패)
  - 2012. 2. 29 북미 합의 파기
  - 농축우라늄 계획 및 경수로 건설 지속
  - 북한에 의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상존
- 핵문제 해결 위한 남북한 간 협의 부재
- 북핵문제 협의를 위한 6자회담은 2008. 12월 이래 공전

### 새누리의 약속

- 큰 틀에서 해결 모색 →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
-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
-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

### 새누리의 실천

-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추진
-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
- 한·미·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,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
-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·경제·외교 조치 강구

##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

### 새누리의 진단

- 남북한 간 일체의 공식 대화 채널 단절 및 교류·협력 중단
- 기존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남북간 불신 심화
-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호혜적 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요구 증대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정치·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·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
-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
-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
-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
  -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
    - ※ 유엔 새천년개발계획 핵심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
    - ※ WHO, UNICEF, WFP 등 국제기구 적극 활용
  -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
    - ※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, 전면적 생사확인, 영상메시지 제작
  -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

### 새누리의 실천

-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‘비전 코리아 프로젝트’ 추진
  - 인프라 확충 :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·교통·통신 등

---

-국제투자 유치 :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, 경제특구 진출 모색  
-3각 협력 강화 : 남북중,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 창출

■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

- 보건 · 의료 협력과 녹색경제(농업, 조림, 기후변화)협력 체계화
-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
-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 · 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
-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

■ 서울과 평양에 '남북교류협력사무소'설치

##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

### 새누리의 진단

-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 이끌어 내기 위한 통일비전 제시 필요
- 통일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통일준비 미흡
- 통일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탈북민 지원 노력도 미흡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
  -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 추진
-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 추진
  -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·발전
  -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외교 지속 추진
-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

### 새누리의 실천

-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
  -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복송 방지
  - UNHCR 등과 협력
  -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
  -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민족 유대감 확대